

특수사례로서 동독의 체제전환: 특별한 조건과 예외적 결과*

헬무트 바그너(Helmut Wagner, 전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번역: 이봉기(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

1. 서문: 일반적 사례의 예외로서 동독의 체제전환

소련 붕괴 이후에 발생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체제전환의 역사에서, 동독의 자기 해체는 대체로 오늘날 개관할 수 있는 바로는 극단적인 특수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동독이 자신의 개혁을 시작할 즈음에 동독 스스로 자신의 존립을 포기하였으므로, 이후 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의 뜻에 의한 틀 내에서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서독에 가입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 이 논문은 2006년 10월 23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소재한 알 파라비(Al-Farabi)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 둘째, 동독은 대부분의 체제전환국가와 달리 ‘후발 혁명/따라 잡기 혁명(nachholenden Revolution)’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즉, 1933년 국가사회주의의 권력장악과 1945년 소련 점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중단된 발전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계속하였다.
- 셋째, 독일통일이러는 사건은 동독 체제전환 방식에 따른 중요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에 관한 국제정치적 상황의 결과이다.

이에 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 상황으로 인해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나타난 정치적·경제적·심리적 변화를 다른 체제전환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 동독이 다른 체제전환국가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구동독 지역에서의 실업을 증가, 산업생산의 붕괴와 같은 경제적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요된 사회주의에 의해 낙인처럼 되어버린 사회주의화된 민족의 운명, 즉 구동독 지역 주민 일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적 문제와 같은 것이 비교될 수 있다. 비교될 수 없고 또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독의 붕괴가 소련 제국과 소련의 몰락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 제국의 몰락) 이후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동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처음에는 해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경로를 걸었고 나중에는 새로운 통합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헬무트 비젠탈(Helmut Wiesenthal)에 따르면, ‘전환(Transformation)’은 모든 사회부문이 변화의 폭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부딪혀야 하는, ‘완전한 체제전환(kompletten System)’을 의미하는 사회의 개조를 뜻한다.¹⁾

전환은 국가의 정치체제·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체제에도 해당한다. 전환은 국가사회주의체제, 즉 ‘사회주의로부터 전환(Abkehr vom Sozialismus)’이며, 다윈주의체제, 즉 ‘자본주의로의 전환(Hinwendung zum Kapitalismus)’을 의미하며, 어느 경우든 심도 있는 변혁을 수반한다. 이러한 변혁이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면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고통이 수반되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화적인 발전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동독을 돌이켜보면, 거의 두 세대에 이르는 57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즉 1933년에는 나치, 1945년에는 볼셰비즘이라는 사이비 혁명적(pseudo-revolutionäre) 지배세력에 의해 무참히 중단되었고 다른 길로 이끌려갔다. 여기서 분석하려는 구동독의 변혁은 강제적으로 중단된 발전이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계속되는 비교적 짧고 빠른 과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실현하는 데 100여 년이 걸렸다. 동독은 고유의 민족국가, 안정적 민주체제, 올바르게 작동하는 시장경제를 서독으로의 편입을 통해 넘겨받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역시 낙관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많은 어려움에 빠졌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로소 밝혀졌다. 앞으로도 홀로 지고 가야 할 체제전환과정이 이들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

1) Vgl. Helmut Wiesenthal(Hg.), *Gelegenheit und Entscheidung: Policies und politics erfolgreicher Transformationssteuerung*(Wiesbaden, 2001), S. 7ff. 전환을 다룬 많은 글들 중에서 여기서는 4개의 주요한 자료만 제시하였다. Wolfgang Merkel,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Empirie und Theo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Opladen, 1999); Wolfgang Merkel und Hans-Jürgen Puhle, *Von der Diktatur zur Demokratie: Transformationen, Erfolgsbedingungen, Entwicklungspfade*(Opladen, 1999); sowie Klaus von Beyme, *Systemwechsel in Osteuropa*(Frankfurt a. M., 1994); sowie Helmut Wiesenthal, *Die Transformation der DDR: Verfahren und Resultate*(Gütersloh, 1999). 본고에서는 동 책자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담이 될지에 대해서는 1990년 전후의 갑작스러운 출발로부터 10~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서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버거운 역사적 부담을 지고 따라잡기 혁명(nachholende Revolution)²⁾을 실현해야 한다.

본고의 각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절에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독일통일에 의해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독의 체제전환의 기회를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다. 3절은 동독에서 진행된 변혁을 주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 빠르게 전체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연결된 구동독 주민의 정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행된 변화에 대한 평가는 4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5절에서는 전환자와 피전환자 그리고 체제전환의 승자와 패자를 주제로 한다. 특히 동독의 체제전환으로부터 개별국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에 유용한 교훈을 숙고해보기로 한다.

2) Jürgen Habermas, *Die nachholende Revolution*(Frankfurt a. M., 1990) 참조. 하버마스는 동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는 ‘잃어버린 발전을 따라잡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 180). 하버마스가 생각한 것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중민주주의를 달성함으로써 헌법적으로는 시민혁명의 유산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발전된 자본주의의 생활형식과 교류형식에 연결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동독은 40년 동안 서독과 분리되었던 것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이었다(S. 181). 하버마스는 의미 있고 불길한 예측을 첨언하였다. 따라잡기 혁명의 특징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된, 프랑스 혁명 직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언어용례를 기억나게 하고 있고, 개혁적 의미에서 천체의 순환과 같이 교대로 나타나는 정치지배체제의 회귀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다.

2.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통일

우선 언급하고 싶은 것은 1980년대 서독의 누구도 독일통일이 그렇게 빨리 닥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³⁾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는 당시에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는 독일 민족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Lebenslüge)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을, (불가능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콜(Helmut Kohl) 전 총리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도 통일이 (언젠가) 오리라는 것을 항상 믿어왔지만, 자신의 생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었다. 1998년부터 총리를 지냈던 슈뢰더(Gerhard Schröder)는 1989년 6월에도 “서독 정부 수립 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의 새로운 세대에게 독일통일의 기회에 대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소련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중에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좋은 싫든 역사의 무대로부터 내려오리라고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 Manfred Görtemak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 Von der Gründung bis zur Gegenwart*(München, 1999) 참조. 1989년 가을의 변혁은 동서독 모두 준비 없이 맞이하였다(S. 733). 1980년대에는 서독 주민의 약 7%만이 독일통일을 중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Manuela Glaab, *Deutschlandpolitik in der öffentlichen Meinung*(Opladen, 1999), S. 144.

4)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München, 2006), S. 104.

1) 국내정치적 상황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우드워드(Bob Woodward)가 1990년 1월에 미국으로 보낸, 동독에서 본 독일 정세에 대한 서방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전형적인 것인지 필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드워드는 1주일간 동베를린에 체재한 후 타임지에 통일을 찬성하는 독일인을 아직 만날 수 없었다고 썼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자본주의 동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명되었듯이, 우드워드는 자신의 좌편향된 동독의 정보제공자에게 신뢰를 보냄으로써, 혹은 자신의 편견을 따름으로써 완전히 실수한 셈이었다. 같은 시점인 1990년 1월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6%의 동독 주민이 독일통일에 찬성하였다.⁵⁾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에서는 동독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가급적 빠른 서독으로의 병합에 찬성하였다.⁶⁾ 1990년 12월 2일에 실시된 독일통일 후 최초 총선에서는 유일하게 신속한 통일을 반대했던 녹색당(Grüne)은 서독지역에서 5% 제한조항에 미달하는 4.7%를 획득함으로써 비례대표의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역주: 독일에서는 정당별 투표 제2투표에서 5% 미만을 획득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지 못한다). 반면에 통일을 지지했던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중사회당(PDS)은 구동독 지역에서 11.1%의 정당별 투표를 획득함으로써 비례대표의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⁷⁾ 그러므로 1990년

5) Klaus Schröder, a.a.O., S. 174.

6)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 48.1%, SPD 21.8%, PDS 16.3%, FDP(Bund Freier Demokraten) 5.3%, Bündnis 90(동독 시민운동가의 연합체) 2.9%. 민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은 가급적 신속한 통일 또는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Manfred Görtemaker, a.a.O., S. 748 참조.

7) Volker Gransow und Konrad H. Jarausch(Hg.), *Die deutsche Vereinigung: Dokument*

에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1990년 8월 23일 동독의 자기 해체를 결정한 동독 주민(동독 국민의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일의 전체 국민에 의해 전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 셈이다.

2) 국제적 반응

1989~1990년 갑작스럽게 독일통일의 기회가 정치적 어젠다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1945년 4대 전승국의 반응은 독일 국민의 태도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단지 미국만이 독일통일에 찬성하였다. 물론 유보조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즉, 새롭게 통일된 독일은 NATO에 잔류해야 하며 유럽연합에 속해야 하고,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인 오더-나이세 강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유럽 국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처의 영국 정부는 (독일인이 가지고 있던) 감동과는 완전히 달랐고, 오랜 중간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럽 한가운데 위치한 통일 독일을 통한 유럽의 현재 국가체제의 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초기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⁹⁾ 물론 이 점은 미테랑이 잘못 평가한 것이었다.

zu Bürgerbewegung, Annäherung und Beitritt(Köln, 1991), S. 224. 선거의 전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CDU·CSU=43.8%, SPD=33.5%, FDP=11.0%, PDS=2.4%, die Grünen=3.9%, Bündnis 90=1.2%. 민사당은 독일 전체적으로는 2.4%밖에 득표(제2투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 제한조항은 1990년의 선거에서는 특별히 동서독 선거구를 분리하여 적용되었다. 즉, 민사당은 구동독 지역의 선거구에서 9.9%를 획득함으로써 5% 제한조항을 넘어섬으로써 비례대표의원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녹색당의 경우 구동독 지역의 연합정당 Bündnis 90이 5.9%를 득표하여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8) Klaus Schröder, a.a.O., S. 153 참조.

고르바초프는 일정 시기에는 오락가락하였다. 1989년 12월 9일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독일통일 계획에 강한 어조로 반박하였다.¹⁰⁾ 그러나 1월이 되면서 그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월 30일에 고르바초프는 당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던, 사회주의통일당의 당 관료이지만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녔으며, 여전히 동독의 존립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믿고 있었던 동독 총리 모드로(Hans Modrow)에게 냉담하게 소련의 이해가 변화했다고 통보했다. 이제 동독은 자신의 존립을 위한 대화파트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¹¹⁾ 2월 10일에 서독 총리 콜은 “독일 스스로 독일 민족의 통일을 해결해야만 하고, 어떤 국가 형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속도와 조건으로 통일을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였다.¹²⁾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10년 후 회고록에서 “독일 민족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¹³⁾라고 언급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도 소연방의 존속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실수를 한 것이었다. 독일 통일은 모스크바 결정 이후 궤도에 진입했고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7월 16일에 스타프로폴(Stavropol)에서 있었던 ‘통일 독일은 서

9) Philip Zelikow und Condoleezza Rice, *Sternstunde der Diplomatie: Die deutsche Einheit und das Ende der Spaltung Europas*(München, 2001)에서 밝힌 독일통일을 보는 서방측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는 태도를 유보하였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드러내놓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10) Klaus Schröder, a.a.O., S. 153.

11) Manfred Görtemaker, a.a.O., S. 741f 참조.

12) Alexander von Plato,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Ein weltpolitisches Machtspiel*, 2(Aufl., Berlin 2003), S. 274.

13) Michail Gorbatschow, *Wie es war: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Berlin, 1991), S. 170.

독, 베를린, 동독을 포함하는 동시에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을 수 있다'는 고르바초프의 양보는 서독에게 있어서는 소련에 의한 보증이 되었다.¹⁴⁾

3) 독일통일의 도정

독일통일을 위한 대외정책적 진로는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해졌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통해 (동서독 간의) 문이 열리고 난 후, 독일통일이 1990년 10월 3일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독일통일은 329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되었다.¹⁵⁾

1989년 11월 9일 저녁 7시 7분, 1961년부터 베를린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사회주의통일당 정치국의 불확실한 결정에 의해 열렸다. 많은 동베를린 주민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자 서베를린으로의 통행을 더 이상 봉쇄할 수 없었다.¹⁶⁾

11월 28일 서독 총리 콜은 국회연설에서 “10개 항의 독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양 독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하였

14) Horst Teltschick,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Berlin, 1991), S. 334 참조.

15) 일자 계산은 콜 총리의 대외정책 보좌관이었던 텔츠키 자신의 저서에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Horst Teltschick, a.a.O., S. 7 참조). Hannes Bahrmann und Christoph Links, *Chronik der Wende*(Berlin, 1994), S. 5에서 동독 정권 40주년 기념일이었던 1989년 10월 7일부터 라이프치히의 마지막 월요시위가 열렸던 1989년의 12월 18일까지의 ‘극적인 73일’을 저자들의 방식으로 문서화하였다. 독일통일 관련 괄호로 처리한 이하의 상세한 데이터는 Volker Gransow und Konrad H. Jarausch(Hg.), a.a.O., S. 93f에서 인용하였다.

16) Manfred Görtemaker, a.a.O., S. 732 참고. 장벽 붕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자에서 다루고 있다. Hans Hermann Hertle, *Der Fall der Mauer: Die unbeabsichtigte Selbstauflösung des SED Staates*(Opladen, 1996), passim.

다. 이 제안을 통해 상황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S. 101f).

1990년 2월 4일 민사당(PDS)이 창당되었다. 민사당은 1946년 4월 21일 창당되어 1989년 12월 9일 SED-PDS로 당명을 개칭 하였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5년에 실시된 연방하원 총선 직전인 2005년 7월 17일에는 좌파당(Linkspartei)으로 당명을 바꾸고 대부분 좌파당·민사당(Linkspartei·PDS, 역주: 2005년 조기 총선에서 사민당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당원과 노동조합의 급진세력이 합세하여 WASG라는 당을 창당하였고, WASG가 민사당과 선거연합을 만들어 총선에 입하면서 민사당은 좌파당이라는 이름을 병기하여 사용하였음)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임했다(S. 106ff).¹⁷⁾

2월 6일 서독 수상 콜은 민주선거에 의해 구성된 동독 정부와 즉각적으로 경제개혁을 포함하는 화폐통합의 협상에 임할 것임을 선언했다.¹⁸⁾

3월 18일 동독에서 자유총선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통일당의 단일 지배체제는 막을 내렸고, 4월 12일에는 야당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기민당 드 메지에 총리에 의해 구성되었다(S. 148).

5월 18일 양독 정부에 의해 동독 체제전환의 첫걸음으로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체결되었다(S. 174ff und 192f).

17) Johannes Kuppe und Thomas Ammer, *Von der SED zur PDS: Analysen und Berichte des Gesamtdeutschen Instituts*(Bonn, 1991); sowie Patrick Moreau, *Die PDS: Profil einer antidemokratischen Partei*(München, 1998) 참고.

18) Horst Teltschick, a.a.O., S. 129; Helmut Wiesenenthal, a.a.O., S. 19 참고.

6월 17일 동독 의회에 의해 신탁관리청이 설립되었고 동 기관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에 착수하였다(S. 185f).¹⁹⁾

7월 1일 양독 간의 제1국가조약에 따라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사이의 교환비율이 원칙적으로 1:1로 교환되는 화폐개혁이 도입되었고 서독 마르크는 전체 독일의 유일한 지불수단이 되었다.²⁰⁾

8월 1일 양독 사이에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확정한 제2국가조약으로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²¹⁾ 서독의 양원과 동독의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후 8월 31일 효력이 발휘되었다(S. 206ff).

8월 23일 동독 의회는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 서독 헌법 23조에 의거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하였다(S. 199ff).

9월 12일 1945년의 전승국인 미국·소련·영국·프랑스를 한 편으로 하고 서독과 동독을 다른 편으로 하는 ‘2+4 회담’에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조약(Vereinigungsvertrag)²²⁾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의 내용은 통일 독일이 1945년의 패전에 의해 야기되어 아직 남아 있는 의무와 조약으로부터 해방되고, 통일 독일이 바라지 않는 독일 영토 내에서의 과거 점령

19) Wolfram Fischer(Hg.), *Trenbandanstalt: Das unmögliche Wagen: Forschungsberichte*(Berlin, 1993), passim 참고.

20) Manfred Görtemaker, a.a.O., S. 750f 참고.

21) Wolfgang Schäuble,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Stuttgart, 1991) 참고.

22) Manfred Görtemaker, a.a.O., S. 766f 참고.

군 철수는 3년 내에 시행하며, 독일은 완전한 국가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S. 224ff).

10월 3일 자정을 기해 독일은 헌법적으로 통일되었고,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되었다(S. 232ff).²³⁾ 얼마간의 지체 후에 베를린이 수도로 결정되었다.

1991년 6월 20일 독일 의회에서 338 대 320, 그리고 기권 2표로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확정되었다.²⁴⁾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은 통일의 실현과 관련되어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기회를 신속하게 활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머뭇거림은 통일을 저해할 수도 있었다.

4) 국제적 승인의 조건

부시 대통령의 미 행정부와 콜 총리의 서독 정부에 의해 탁월하게 연출되고 강행된 통일 과정²⁵⁾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1945년의 4대 승전국의 승인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은 1989년 12월 8~9일의 슈트라스부르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선언을 통해 역시 동의를 받았다. 동 선언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승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12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의해 동의되었다. 그러나 슈트라스부르 선언(*Straßburger Erklärung*)에는 독일통일의 즉각적 실현에

23) 같은 책, S. 766f 참고.

24) http://www.bundestag.de/bau_kunst/berlin/debatte/bd_nam3.htm. 2007년 1월 15일 접속.

25) Philip Zelikow und Condoleezza Rice, a.a.O., *passim* 참조.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었다.²⁶⁾ 이와 달리 통일에 대한 기대는 머지 않아, 즉 4개월 후에 더블린에서 개최된 1990년 4월 28일의 특별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국가 및 정부대표에 의해 유럽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환영받았다.²⁷⁾ 독일통일은 이제 세계적인 동의를 받게 되었다.

대내외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긍정적 반향에 중요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서독이 오더-나이세(Oder-Neiße) 강의 현(구 동독 지역과 폴란드) 국경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고, 그것은 좋은 싫든 1937년 독일 영토의 1/4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동의한 것이었으며,²⁸⁾ 이외에도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유럽통합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콜 총리는 이러한 약속을 1998년 정권 교체기까지 최선을 다해 실천하였다.

동독의 체제전환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서독 및 유럽연합으로의 편입을 통해 독일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동독 주민의 다수가 통일에 대한 자신의 투표를 통해서 표출한 결과였고 그들이 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동독 주민의 사회적 삶에 불가피하게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제도들이, 이제 총력을 기울여 시작되는 전체적 개혁을 외부로부터의 간섭, 동독에 대한 저평가 행위 또는 식민적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우려는 발생하였다.

26) Klaus Schröder, a.a.O., S. 150 참조.

27) 같은 책, S. 185 참조.

28)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937년 독일제국의 영토는 47만 440평방킬로미터였고, 2004년 독일의 영토는 35만 7,050평방킬로미터였다. 따라서 독일의 영토는 11만 3,390평방킬로미터, 즉 약 24.1%가 축소되었다.

3. 체제전환과정의 국면

전체적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동독의 체제전환을 바라본다면, 17년의 전환기간이 지난 지금, 동독의 체제전환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구서독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체제전환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독 수준으로의 도달이 동독 체제전환의 선언된 목표였으며, 여전히 신연방주(구동독 지역)를 위한 목표로 남아 있다. 신연방주의 정치적 시스템은 그 사이 법치국가적이며 다원주의적으로 조직되었고 경제 시스템은 시장경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식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독일의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 사이에 여전히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의식개혁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30년이 흘러 한 세대가 지난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세 가지 부문, 즉 정치적·헌법적 분야, 경제적 분야, 정신적·심리적 분야에 대해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고 실증하며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정치체제의 혁신

정치적 분야와 관련해 동독의 성공적 변화로 입증될 수 있는 전환의 세 가지 측면을 여기서 좀 더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헌법적 질서의 변화, 새롭게 안정된 정당시스템, 그리고 거의 완벽한 정치 엘리트의 교체이다.

우선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유일 정당에 의한 권력독점이 폐지되

었다. 1968년의 동독 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독일 민주 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동독은 노동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정치적 조직이다.²⁹⁾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에는 전독일의 헌법 규범에 맞추어 이제 다원주의적 다당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1949년에 공포된 구서독에 적합했던 기본법의 많은 조항이 조정되지 않은 채 구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1990년 9월 23일부터 1997년 10월 26일 사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8번의 수정조항을 거쳐, 통일 독일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였다.³⁰⁾ 이와 관련 1992년 11월 28일에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치된 ‘합동 헌법위원회’가 1993년 11월 6일에 제출한 제안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었다.³¹⁾ 통일 이전의 기본법 146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법은 독일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조항의 이러한 문구에 따라 기본법은 통일 후 독일 국민의

29) Georg Brunner und Boris Meissner(Hg.), *Verfassungen der kommunistischen Staaten* (Padeborn, 1980), S. 95 참조.

30) Angela Bauer und Matthias Jestaed, *Das Grundgesetz im Wortlauf: Änderungsgesetz, Synopse, Textstufen und Vokabular zum Grundgesetz*(Heidelberg, 1997), S. 62~65. 참조

31) Rupert Scholz,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 Auftrag, Verfahren und Ergebnisse,” in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52~53/93, vom 24. 12. 1993, S. 3ff 참조.

동의를 받은 진정한 헌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잠정적인 법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사민당과 녹색당의 일부는 기본법의 전면적 개정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였다. 왜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것일까? 왜 독일통일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 없이 이루어졌고, 1949년 5월 23일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편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가?

동 기본법은 우선적으로 주정부 바덴, 바이에른, 대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쉴레스비히-홀슈타인, 뷔어템베르크-바덴 그리고 뷔어템베르크-호엔츨레른의 지역에 유효하다. 다른 지역은 편입 이후 기본법이 효력을 발휘한다.³²⁾

왜 현재의 기본법은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쳐야 했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통일을 서둘러 이루어야겠다는 성급함 외에도 — 국민투표를 통한 완전한 새 헌법의 제정과 협상에 반대한 — 한 가지 공식적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논의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공식적 이유는 연방 지역을 다시 구획해야 할 때에는 기본법 29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기본법에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를 헌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법 79조 2항과 관련해서는 이에 필요한 독일 양원, 즉 상원과 하원에서 2/3의 찬성표 도달이 당시에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의일 수 있다. 즉, 의회적 방식을 규정한 기본법 79조 2항에 따라 양원에서 2/3 다수를 획득하

32) Hamann und Lenz,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vom 23. Mai 1949, 3. Aufl.(Neuwied, 1970), S. 371.

고 국민투표는 배제하면서 필요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정치적 논의가 있었다. 결국 (현실적으로) 관철된 국민투표를 배제한 헌법 개정 역시 또 다른 기본법 해석에 따르면 전적으로 기본법의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미 실증되었고 상당히 평가받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여론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선거참여율 내지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거 불참여자에 의해 국민투표를 통한 방식이 부끄러운 결과(역주: 국민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나타날 경우 통과하더라도 불참자의 비율이 높다면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율을 유지해왔는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투표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 총선의 투표율은 77.7%였다)를 야기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명성에 단지 누가 될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서독 기본법 이 약간의 수정을 통해 국민투표 없이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다.

신연방주의 정당체제와 관련해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에 참여했던 24개의 정당을 통해서—이 중에서 12개 정당이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을 통해 동독 의회에 진입하였다³³⁾—야기된 초기의 국내정치적 혼란 후에 이제는 구연방과 비견될 수 있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형성되었다. 통일 이후 민사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이라는 단 하나의 정당만이 새롭게 늘어난 셈이 되었다. 이 신생 정당은 2005년 총선, 즉 동독 붕괴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좌익당·민사당(Linkspartei·PDS)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독일에서 8.7%를 득표하였고, 구동독 지역에서는 25.3%로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³⁴⁾ 동서독 지역에 걸쳐 매우 다양한 지지층을 보

33) Volker Gransow und Konrad H. Jarausch(Hg.), a.a.O., S. 148 참조.

34) Klaus Schröder, a.a.O., S. 471. 지난 총선에서 민사당은 1990년에 11.1%, 1994

여주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서독지역에서의 민사당 지지층은 사민당이 충분히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동독지역에서의 민사당 지지층은 서독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거부와 동독이라는 국가에 이데올로기적 연결을 표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으로서 ‘좌익당·민사당’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전적으로 민주적이다. 이것은 지자체 및 주정부 수준에서 민사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구성된 수많은 연립정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현재에도 여전히 때때로 당연하다는 듯이, 민사당을 반민주적·비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사당은 정당정책적 분석에서 민주적으로 통합되었고, 좌익극단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위협이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사당은 오히려—정당전술적 이유에서 때때로 배제되는 극우적 그룹인 민족민주당(NPD)과 유사—안정된 정당체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민주적 정당스펙트럼의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당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모든 다른 정당, 즉 구서독 정당에 의해 설립되고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은 물론 자민당과 녹색·연대90 역시 완전히 또는 대부분 구서독 정당의 지사라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현재 구동독 지역 주민의 일부에 의해서는 치욕으로 느껴지고 있는 점도 있다. 이들 모든 정당들은—민사당 역시—당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선거 참여는 구연방주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낮다는 것 또한

년에 19.8%, 1998년에 21.6%, 2002년에 16.9%을 득표하였으며 특별히 동독 지역에서 지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Helmut Wiesenthal, a.a.O., S. 74 및 필자의 보완. 민사당이 얻은 전체 독일에서의 득표율은 1990년 2.4%, 1994년 4.4%, 1998년 5.1%, 2002년 4.0%, 2005년에는 좌익당·민사당 8.7%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이다. 이것은 동독의 특별한 역사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현상이—안정된 정당에서의 당원 감소, 선거율 저조, 신연방주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저 포퓰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유동적인 선거의사—구연방주에서도 적어도 단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동독 지역의 주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스위스나 미국과 같이 노쇠한 민주주의(Altdemokratien)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반화되었기에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통일 이후 일련의 사실들이 구동독의 정부 및 행정기구에서 행해진 인적 정리의 가혹함을 명확히 대변하고 있다. 동독의 외교부와 외교 업무에 종사했던 약 8,000명의 직원 중에서 단지 35명의 통·번역사만을 서독 외교부가 넘겨받았다. 1989년 17만 3,000명이었던 동독 국민군에서 단지 1만 666명의 젊은 장교와 부사관이 서독 연방군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³⁵⁾ 반면에 대부분 사회주의통일당 당원과 국가안전부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 행정기구의 요직은 거의 모두 교체되었다. 국가안전부와 비밀경찰의 직원으로 밝혀지거나 협조자였던 대학의 모든 교수는 대학을 떠났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부 직원이나 협력자들이 공적인 직위에 취임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력의 퇴출을 보충하고 시작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에 따르면 초기 단계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약 10만 명에 이르는 서독의 전문인력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정치부문 지도세력의 교체에 대한 또 다른 다양한 수치는 시

35) Manfred Görtemaker, a.a.O., S. 774 참조.

사하는 바가 많다.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5개 신연방주—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의 주의회에서 1990년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509명의 주의회의원 중에서 이전 사회주의 동독 국민의회 소속은 단지 5명에 불과했다.³⁶⁾ 따라서 동독의 정치 엘리트, 특히 국가 및 준국가적인 주요 직위는 대폭적으로 교체되었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서독 전문가’의 투입을 통해 가능하였다.

2) 경제 및 사회 체제의 혁신

경제분야에서는 동독의 중앙집권경제체제가 1949년 이래 서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은 동독의 체제전환이 넘어서야만 했던 아마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변혁과정에 속한다. 소유권 전환이 경제적 개혁의 주요한 특징이라면, 높은 실업률은 두 번째 특징이고,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세 번째 특징이 될 것이다.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상세히 밝혀보기로 한다.

동독의 전체 국가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동독의 국가경제는 우선 사유화되었다. 그것은 현존하는 대규모의 모든 경제기업들이 조직·생산·가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정했던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독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일까? 사유화의 거대한 업무는 신탁관리청에 맡겨졌다. 신탁관리청은 과거 동독시절인

36) 같은 책, S. 773 참조.

1990년 3월 18일의 총선 이후 6월 17일에 설립되었고 11월 13일에는 공법상 연방청 단위의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연방 재무부의 전문적·법적 감독 아래 있었다.³⁷⁾

4,600명의 직원이 근무했고, 1994년 12월 31일 소규모의 청산기금으로 재차 해체된 거대 국가관청(신탁관리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주회사이기도 했다. 신탁관리청은 410만 명이 근무하는 1만 2,000개의 독립적 기업을 만들어냈다. 신탁청은 7,85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적·조합적·지역적·국가적 소유자를 새로 찾아냈고 매각을 통해 600억 마르크를 벌어들였다. 약 2,000개의 기업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역시 2,000여 개의 회사는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신탁관리청이 1994년 말에 해체되었을 때, 기업의 유지와 매각을 위해 떠맡아야 했던 지불의무 액수로 인해 부채가 수익보다 4배나 많은 약 2,700억 마르크가 되었다. 결국 부채는 국가재정으로 넘어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했다.³⁸⁾

많은 비용을 수반한 동독 인민재산의 시장경제적 생존능력이 있는 기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1998년까지 320만 명의 구동독 주민을 고용하는 5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숫자는 전체 신연방주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³⁹⁾

동독 인민재산이 중앙집권 방식에 의해 신속하게 다원적 소유관계로 전환되었고, 국가지원이 증대하였는데도 1989~1990년 전환기 이

37) <http://de.wikipedia.org/wiki/Treuhandanstalt> 참조. 2007년 2월 20일 접속.

38) Dieter Gross, "Treuhandanstalt," in U. Andersen und W. Woyke(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 Aufl.(Opladen, 2003), S. 620~630. 논문의 말미에서 저자는 "회고컨대, 신탁관리청이 취한 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대안을 찾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쓰고 있다.

39) Manfred Görtemaker, a.a.O., S. 774f 참조.

후, 국가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서독과의 국경 개방에 따라 야기된 서독 상품의 범람, 그리고 동독의 동구무역의 붕괴 때문에 1990~1991년 동독의 산업생산은 1988년 기준 7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90년 중반 전체 고용인력이 1/3 정도 감소한 430만 명으로 떨어지는 것과 신연방주의 실업률이 1992년 16.8%로 증가해 1997년에도 여전히 16.2%에 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⁴⁰⁾ 직업적 생활에서의 위험, 불확실, 곤궁 및 노령연금과 같은 것들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서독의 사회적 안전망을 축소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신연방주에 확대한다는 것이 동독과 서독 사이에 1990년 5월 18일과 8월 31일에 있었던 2개 국가조약에서 합의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붕괴의 부정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한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⁴¹⁾ 서독정부는 이로 인해 야기된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독일 정부가 조달해야만 했던 비용은 사유화 비용, 사회보장, 그리고 완전히 낡은 동독의 경제적 인프라 정상화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1998년까지 570만 회선의 현대화된 전화 및 인터넷이 설치되었고, 1만 1,500킬로미터의 간선도로와 5,300킬로미터의 철로가 개보수되었고, 모든 교량이 보수되었으며, 주거시설·호텔·사무실이 저렴한 용지를 통해 개보수되었다. 전체 동독 인프라의 이러한 현대화는 서독 측의 재정이전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⁴²⁾

구연방주(구서독 지역)로부터 신연방주(구동독 지역)로 유입된 정부

40) Helmut Wiesenthal, a.a.O., S. 63~64 참조. 필자의 기술은 개략적 수치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Wiesenthal의 저서에 있는 DWI의 주간보고의 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 Manfred Görtemaker, a.a.O., S. 777f 참조.

42) 같은 책.

재정자금의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고 있다.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이라는 프로그램에만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직접적 지원자금으로 2,500억 유로가 지원되었다.⁴³⁾ 1998년의 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구동독 지역에서 세금 등으로 연방정부에 다시 흘러 들어간 액수를 제외하고 구동독 지역으로 이전된(순이전) 금액은 총 1조 310억 유로에 달하였다.⁴⁴⁾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총 재정 이전규모는 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클라우스 슈뢰더 교수의 신출에 따르면 총 이전금액은 1조 4,000억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한다.⁴⁵⁾ 이것은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신연방주 주민의 복지 수준을 가급적 빨리 구연방주 주민의 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앞으로 불가피하다.⁴⁶⁾

3) 독일 자의식의 모순

구동독 지역 주민과 구서독 지역 주민이 자신과 상대에 대해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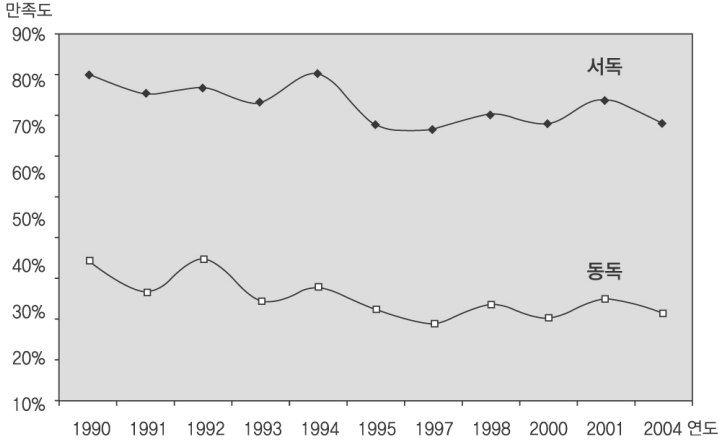
43)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06), S. 8.

44)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1999), S. 4, 33, 39ff.

45) Klaus Schröder, a.a.O., S. 228~229 참조. 슈뢰더 교수는 이와 관련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약 1조 7,400억 유로가 구연방주에서 신연방주로 이전되었다. 동기간 동안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다시 연방정부로 유입된 금액을 차감한 순이전금액은 1조 4,000억 유로이다”(S. 230)라고 주장하고 있다.

46) Manfred Görtemaker, a.a.O., S. 777 참조.

<그림 1> 민주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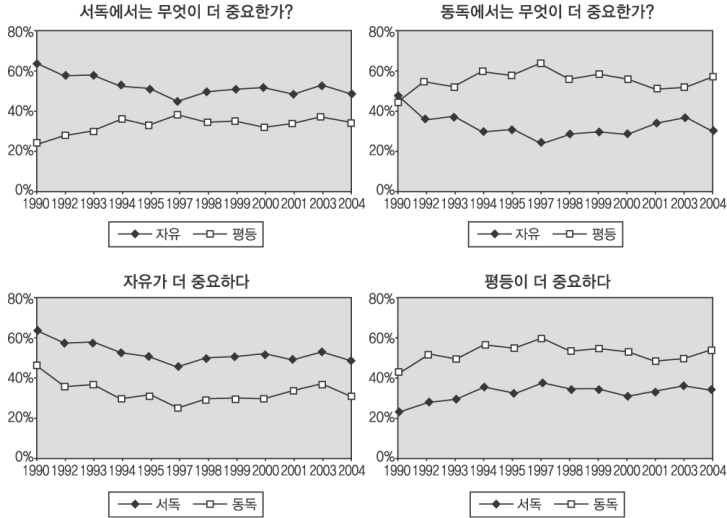
주: 결과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국가형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좀 더 나은 국가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S. 491 참조

고 있는 의견은 어떠할까? 이러한 질문은 이제 다음의 질문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섯 가지 질문에 관한 것이다. 질문은 ① 독일 양쪽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태도, ②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생각, ③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 ④ 구연방(구서독 지역)과 이제는 마찬가지로 된 신연방(구동독 지역)의 경제시스템에 관한 생각, ⑤ 양독의 공동 성장이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모든 설문 조사의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기껏해야 어떤 점에 한해서 경향을 보여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한때 습득된 신념의 계속성을 증명할 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동서독 양쪽 지역의 주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그림 2> 자유 또는 평등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S. 508 참조

있듯이,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주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지난 14년간 약간의 변동 폭을 보인 83~72%가, 구동독 지역에서는 초기에서 42%였던 것이 조사기간의 끝 무렵에는 28%가 민주주의가 ‘최선의 국가형태’라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매우 다양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이 앞에 제시된 데이터에 담겨 있으며, 일단 익숙해진 의견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통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독일의 양쪽 모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동의가 같은 정도로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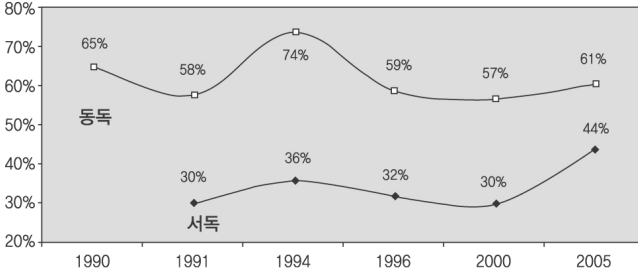
약간은 덜 추상적이면서 양 독일 주민의 정치적 의식과 관련된 것이 두 번째 설문이다. 양 독일의 주민에게 자유 또는 평등 중에서 어떤 가치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통계에서 놀라운 것은 양쪽 모두에서 사회화를 통해 한번 내면화된 가치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명백히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각인된다는 것이다. 양쪽에서 자유와 평등은 상당히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동쪽에서는 평등을, 서쪽에서는 자유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같은 이유로, 완전히 사회화를 통해서 획득된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제시하는 설문은 ‘사회주의는 좋은 이념인가’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 동 자료에서 필자에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분명히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에는 불일치가 35%에 달한 반면, 2005년에는 정확히 절반인 17.5%로 감소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사회주의’ 개념이 현재에는 (더 이상) 투쟁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관련된 것보다는 원래의 어원적 의미에서 양 독일지역에서 한층 더 같은 정도로 중립적으로 이해된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에서 우선 놀라운 것은 서독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n Marktwirtschaft)’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1960년대에 서독주민에게 경제적 기적을 가져다주고, 1990년대 동독 주민에게 복지의 약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최근 조사에서 경제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구동독 지역에서 12%, 구서독 지역에서 25%라는 하락으로 떨어진 부정적 평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저조, 실업 증대,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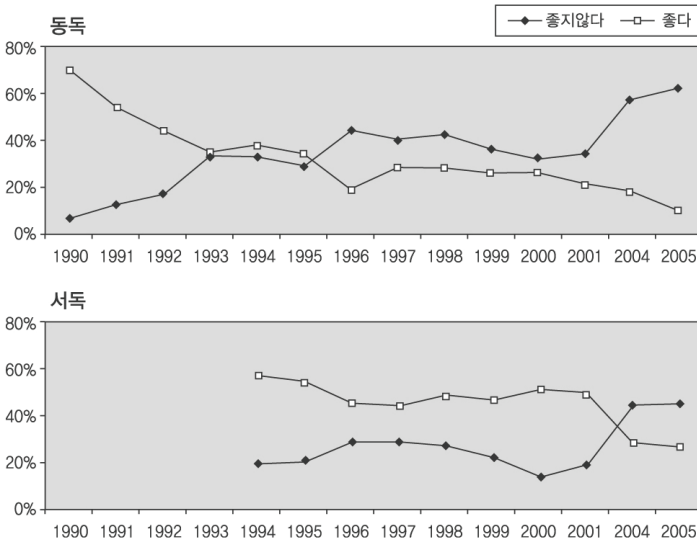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주의는 좋은 이념인가?



주: 결과는 “사회주의를 (현실에서) 잘못 실천된 좋은 이념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S. 7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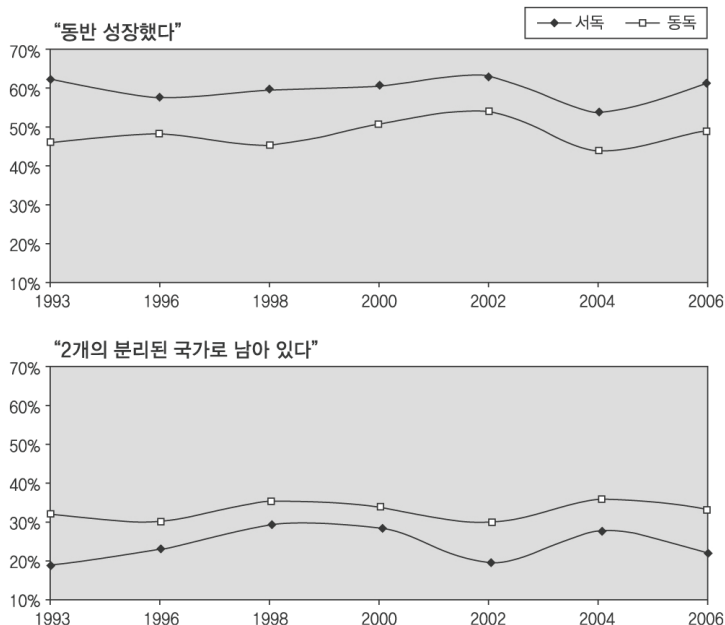
<그림 4> 구동·서독 지역에서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주: 결과는 “당신은 독일의 경제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서독의 경우 1994년 이전의 수치는 없음.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S. 751 참조

<그림 5> 내적 통일



주: 결과는 “당신은 동서독이 동반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위) 또는 동서독이 기본적으로 2개의 분리된 국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아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S. 765 참조

감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필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다루었다. 동 설문은 ‘독일의 동반 성장’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밝혀진 답변은 구동독 지역에서는 약 30%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데 반해 거의 50%에 이르는 상대적 다수가, 그리고 구서독 지역에서는 소수인 약 20%의 부정적 답변에 비해 80%에 이르는 다수가 양 독일의 공동 성장이 성공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그림 5> 참조). 이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설문에서 두 개의 국가가 계속 존재하였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데 찬성한 약 30%의 상대적으로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독일통일에 따라 보장된 그들의 복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불만족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체제전환의 결과

이제 여기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고유의 성격을 지닌 동독 체제전환의 중간 결산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최종 결산이 아니라 그저 중간 결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필자의 분석은 소수의 적은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에 다른 척도를 들이댄다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밝힌 바 있는 필자의 기준은 필자에 의해 분석된 세 가지 사회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분석은 다음의 결과를 명백히 하고 있다.

1) 엘리트 교체와 정당 증가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통합

정치적·헌법적 분야와 관련해 필자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민주화된 동독에서 비록 소수의 영역이었고 대부분 서독 지식인들로 한정되었지만 헌법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그런데도 이러한 토론은 성과 없이 끝났고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필자가 앞서 기술

한 것처럼, 서독의 기본법이 약간의 수정을 통해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다.⁴⁸⁾ 헌법에서 특별히 동독적인 특색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찾아볼 수 없다.

신연방주에서의 정당체제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24개 정당이 존재하였고, 그중 12개 정당만이 1990년 3월 18일의 선거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⁴⁹⁾ 동독의 자기해체 이후에는 곧바로 다시 5개 정당으로 감소되었다.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은 서독의 안정된 정당인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Die Grünen)과 통합하였고, 스스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민주화된 후속정당이라고 일컫는 민사당(PDS)이 새로운 정당으로 남았다.

민사당이 반민주주의 정당인지 또는 비민주주의 정당인지에 대한 입증은 때때로 시도되었으나, 민사당은 신연방주의 정당시스템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민사당은 창당 이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번, 즉 주정부 차원에서 3번에 걸쳐⁵⁰⁾ 사민당과 연정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연정이 정부 위기의 원인이 된 적은 없었다. 동독의 편입을 통한 통일의

47) 베를린 중앙 원탁회의의 동독의 신헌법에 관한 작업팀에 의해 마련된 총 136조로 구성된 헌법초안이 1990년 4월에 발표되었다. 작업팀의 일원으로 특히 서독 측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는데 그중에는 당시 브레멘 대학의 교수였고 현재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인 Ulrich K. Preuß가 있었다. http://www.document-Archiv.de/ddr/1990/ddr-verfassungsentwurf_rundertisch.htm, 2007년 1월 15일 접속; sowie Klaus Michael Rogner, *Der Verfassungsentwurf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der DDR*(Berlin, 1993) 참조.

48) 이 글의 ‘3. 1) 정치체제의 혁신’에서 논의.

49) 각주 33 참조.

50) 3개 주는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그리고 베를린이다.

결과로 앞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안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민사당은 그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고려에 넣어야만 하는 신연방주의 정치적 목록이자 자산이 되었다.

신연방주의 고위 정치 지도세력이 광범위하게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 정치세력과 행정전문인력에 대한 막대한 ‘서독의 구입방식(Westeinkauf)’을 통해 대체되었다는 것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안정에 뚜렷이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체제전환국가에서 빈번히 나타난 정당의 해체와 창당, 빈번한 정권 교체, 그리고 높은 선거 기권율을 만들어낸 갈등 가능성이 (독일에서는) 제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확실히 신연방주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독이) 서독의 사회적 국가를 수용함으로써 갈등요인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중하류 지도층에 공산주의 세력과 개인적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남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구동독 지역 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사이에 신연방주의 광범위한 주민층에서 동독에 대한 향수가 얼마간 좋은 논조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것은 다시 논의될 것이다.⁵¹⁾

2) 생산력 후퇴에 의한 경제적 침체와 실업률 변동,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인프라의 현대화

전환기 동독 노동력의 2/3가 일자리를 위협받거나 실제 잃어버린

51) 이 글의 ‘4. 3) 사회주의화의 심리적 결과’에서 논의.

경험은 평화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64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410만 명이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무엇 보다는 인민 소유, 즉 국유화된 동독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이다. 동독 상품의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다른 판로를 찾지 못하였다. 동독의 상품은 구식이었고 서독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 소비자를 거의 찾지 못하였다. 동구의 소비자들은 동독의 상품에 대해 서독 마르크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동유럽과의 무역은 거의 붕괴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동독의 경제 생산력을 1988년 기준에서 볼 때,⁵²⁾ 약 72% 수준으로 하향시켰고 전환기 직후 실업률을 18%로 치솟게 했다.⁵³⁾ 금년 초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구서독 지역의 8.4%보다 높은 16.9%를 나타내고 있다.⁵⁴⁾ 구동독 지역 주민의 많은 숫자가 사회보장 대상이 되어 통일 독일에 사회보장비 지출의 형태로 부담되었다. 황폐해진 동독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자금과 사유화 자금 등이 추가적으로 사회적 국가의 비용이 되었다. 도로 및 철도의 증축, 교통수단의 현대화, 대부분의 교량과 댐의 개보수, 그리고 유리한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주거 및 사무실, 호텔, 식당의 건축 등을 통해서 통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구동독 지역의 인프라가 구서독 지역보다 더 나은 상태에 도달했다.

52) Helmut Wiesenthal, a.a.O., S. 63 참조.

53) 같은 책, S. 64 참조.

54) Monatsberich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Januar 2007, S. 4, in <http://www.pub.arbeitsamt.de/hst/services/statistik/000000/html/start/monat/aktuell.pd>. 2007년 2월 14일 접속. 전체 독일의 실업률은 9.5%이다(역주: 2007년 7월의 실업률은 독일 경제의 활황으로 구서독 지역 7.3%, 구동독 지역 14.7%, 전체 독일 8.8%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자주 간과되고 있는 동독 체제전환의 자랑스런 한 페이지이다.

동독 경제의 보수를 위해 네 가지 부문에 투입된 비용, 즉 사유화, 사회적 국가 비용의 인수, 인프라의 증축,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 보조에 투입된 비용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치솟았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산출하면 1991~1998년까지 7년 동안 구동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총계는—구동독 지역에서 다시 연방정부로 되돌아간 금액을 제외하고—1조 31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⁵⁵⁾ 이후 2006년까지 8년 동안, 믿을 만한 평가에 따르면 다시 1조 마르크가 구동독 지역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총 재정 이전금액은 1조 4,000억 유로라고 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증가하였다.⁵⁶⁾ 다시 말하면 총 재정이전금액을 1조 4,000억 유로라고 하면, 전환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매년 1,000억 유로, 정확하게는 약 933억 유로가 구동독 지역에 지원된 셈이다.

재정이전의 끝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구동독 지역을 보게 되면 밑 빠진 독(Fass ohne Boden)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연방주가 통일 독일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불능력과 지불의사가 있는 기부자(구연방주)를 발견한 것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55) 각주 44 참조.

56) 각주 45 참조. 유로화 도입에 따른 마르크화와 유로화의 교환 비율을 2:1로 계산하였다.

3) 사회주의화의 심리적 결과: 민주주의보다 형평, 경제적 비관주의와 부분적 노스텔지어

물론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동독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식을 계량화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양 독일지역의 설문 결과로 제시되고, 특히 구연방주의 설문 결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민주주의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둘째, 구동독 지역 주민과 구서독 지역 주민들은 자유와 평등 중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독일의 양지역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넷째, 1949년의 서독 정부수립 이후 독일에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다섯째, 양 독일 지역에서 즉각적인 ‘공동 성장’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은 것으로 보았는가? 필자의 설명에 따른 결과가 놀랍지는 않더라도 의외인 것은 사실이다.

설문에 대한 개별적 결과는 3절 3소절에서 이미 다루었고 필자의 평가도 덧붙였다.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독일의 양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동독 주민이 경험한 역사적 정황과 사회주의화의 심리적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구연방주 및 신연방주에서 나타난 경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점차적으로 상이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추측컨대 짧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독일의 양쪽에서 수렴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여론 영역에서 전투적 개념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연방주 주민의 약 30%가 동서독이 공동 성장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 이것이 투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 때때로 외관상 보이는 것처럼, 구동독 지역 주민의 동독에 대한 향수가 결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축적된 자료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지속성과 확신이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같은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발생한 모든 것에 있어 이러한 경향의 대부분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주목할 만하게 불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서 — 구동독의 소수가 아닌 — 적어도 본고에 제시된 설문을 통해 드러난 의견과 관련해 영국인들이 말하는 지적인 정체(intellectual lag)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사유의 일반적 특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철학자 헤겔이 언급한 것이 맞는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저녁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즉, 사유는 항상 사건의 뒤를 쫓는다.⁵⁷⁾

57)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Sämtliche Werke*, Bd. 7, 4Aufl. Der jubileumsausgabe (Stuttgart-Bad Cannstatt, 1964), S. 36f. 헤겔의 원전에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nn die Philosophie ihr Grau in Grau mahlt, dann ist eine Gestalt des Lebens alt geworden, und Grau in Grau lässt sich nicht verjüngen, sondern nur erkennen; 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einbrechenden Dämmerung ihren Flug.”

5. 전환자(Transformatoren)와 피전환자(Transformanden), 전환의 승자와 패자

동독 체제전환에 대한 사유와 분석의 결과로, 제목에서 언급한 동독 체제전환의 결과를 의미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하나는 전환자의 동기와 피전환자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독 체제전환의 승자와 패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에 답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 매우 드물게 제기되었으나, 필자는 이를 시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어서는 많은 답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답변하기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답변이 나오도록 자극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가 변혁의 초기인 1992년 단지 추측만 가능했을 때, 변혁에 관해 언급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당시 오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동독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종류로서 전환 방법은 우선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환 방법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국가들이 배를 바다의 공해상에서 수리하는 것인 반면, 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이라는 건조한 도크에서 개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뫼니히하우젠(Münichhausen, 역주: 독일의 모험소설가)의 허황된 지침에 따라 전환을 수행한 것인 반면, 동독은 서독이라는 든든한 구조대에 의존하였다. 물론 체제전환과정에서(서독이라는) 외부 조정자는 다른 국가에는 없는 특별한 단점을 수반할 수도 있다. 비젠탈이 오히려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구동독의 특수지위가 예외 없이 유리했던 것은 아니다.⁵⁸⁾

1) 자본주의적 보상과 사회주의적 불만족

오폐에 의해 사용된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외부적 조종자라는 표현은 동독의 체제전환이 의심할 바 없이 동독 주민에 의해 점화되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체제전환이 외부로부터, 즉 서독의 지원과 지도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주민들이 크건 작건 간에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반면, 권한을 장악하고 체제전환의 코스를 결정하는 외부 조종자가 실제로 존재했다. 양측이 생활수준의 동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실현할 수단,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쪽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분업은 대개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업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다. 분업은 양측의 관계에 있어 고유하며 지속적인 장애를 가져왔다.

서독의 전환자는 어느 정당, 어느 정부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동독의 형제자매들이 원하고 공동의 목적 달성에 유용한 것의 제공을 최상의 과제로 보았다. 처음에는 재정적·인적 지원과 같은 이전이 부자인 서독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체국 창구에서 지불되는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다. 지도된 개혁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실수로 판명되었으나 멈춤은 없었다. 호기 있는 나눠주는 능력이 닿는 한 지원하겠다는 분배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였다. 전환자 중에서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통일을 저해하려는 사람으로 의심받았다. 그리

58) Claus Offe, a.a.O., S. 260. 헬무트 비젠탈의 인용 출전은 다음과 같다. “Sturz in die Moderne der Sonderstatus der DDR in d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Osteurop,” in Michael Brie und Dieter Klein(Hg.), *Zwischen den Zeiten*(Hamburg 1992), S. 172.

고 이외에도 재정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독주민들에 의해 다음 선거에서 가차없이 처벌받았다.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되었다. 전환자들은 지금까지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더 지불할 것이다. 이제 상황은 전환자들(구서독)은 마지못해 재정을 이전하고 피전환자들(구동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자선적 지원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 동기에서 야기된 이기적인 욕심과 고집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동독의 피전환자 측에서는 가급적 빨리 만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원에 신속하게 의존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사회화에 따라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Wiege bis zu Bahre)’ 돌봐주며 그 밖에는 개인적 생활에 침잠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동독 주민들은 (국가에 의한) 종일 돌봐주기와 개인적 생활로의 후퇴하기가 서독에 의해서도 가능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제 동독 주민들은 전과는 달리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답에 감사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 부정의를 한탄하며 새로운 심술거리를 찾고 있다. 다른 곳, 즉 동유럽이 새로 열린 기회를 통해 적극적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피전환자(동독)는 두드러진 소극성을 띠고 있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과거지향적 노스텔지어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비젠탈이 기술하였듯이, 피전환자 또는 그들의 일부는 시민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친교형태에 익숙해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으며, 이보다는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과 동료집단의 친밀한 교제를 아쉬워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성과 실망감’으로부터 “서독지역을 향한 불만 표출로 도피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거나 거부적 관계를 취하고 있다”.⁵⁹⁾ 이것이 바로 비젠탈이

규정한 ‘구동독의 특수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⁶⁰⁾

왜 다른 체제전환 국가와 비교하여 편안하고 목적지향적이라고 여겨진 동독이 걸어온 체제전환 경로가 어쩌서 상처와 소외의 감정을 자극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단지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⁶¹⁾ 너무도 분명한 것은 ‘편안한 체제전환’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독의 체제전환에 즉각적으로 참여한 양측 — 필자는 여기서 전환자(Transformatoren)와 피전환자(Transformanden)라고 명명 — 사이의 불화가 예측되는 일정 시기에 자본주의적 보너스를 경감하고 사회주의적 불만족을 확실히 퇴색시키는 끝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현재 이미 현저하게 나타난 정상적 관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⁶²⁾ 그러면 필자가 이 글에서 시도한 균형 잡힌

59) Helmut Wiesenthal, a.a.O., S. 71.

60) 같은 책, S. 70. 비젠탈의 설명은 클라우스 슈뢰더가 많은 동독주민의 기묘한 행태라고 요약한 12개 이유와 비슷하다. 슈뢰더 역시 12개 이유의 토대를 동독 체제전환의 외부적 조종 탓으로 돌렸다. 통일에 대한 불만족, 물질적 지위와 여론 분위기의 불일치는 다양하지만 핵심에 있어서는 통일과정의 특징으로서 외부에 의해 지도된 체제전환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Klaus Schröder, *Der Preis der Einheit: eine Bilanz*(München, 2000), S. 253.

61) Helmut Wiesenthal, a.a.O., S. 73.

62) 비젠탈은 여기서 묘사한 것보다 더 풍부하게 ‘사회주의적 불만족(sozialistischen Unzufriedenheit)’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Helmut Wiesenthal, a.a.O., S. 67ff 참조. 비젠탈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사회학적 역설(wissenssoziologisches Paradox)’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자신의 특권적 직위의 중요한 부분을 강탈당한 동독지식인이 현재에도 여전히 (물론 감소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고스타일로부터 일정 정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관찰이 적합하다면, 여기서 바로 지식사회학적 역설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노동운동의 환경에서 발생한, 감성적으로 호소하지만 지적으로 덜 복잡한 이념이 20세기 말에 두 가지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각인된 사회세계에서 어느 정도 생존기회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국가정당을 의미 있는 대안으로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동독 지식인의 주변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효율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론과

설명이 일반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모든 행운을 가졌다

앞서 논의된 사항에 이어 동독의 체제전환을 통해서 야기된 최근의 양독 간 분열에 관한 두 번째 특징으로, 이번에는 체제전환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구동독 지역 주민은 —단지 동독 주민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즉, 현재 상태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동유럽에서 진행된 개혁과 체제전환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면 동독주민이 행운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필자의 견해로는 동독의 체제전환과 관련해 패자는 동독의 갑작스런 붕괴와 함께 꿈이나 희망했던 경력의 실현이 좌절된 사람들이다. 반면에 연금생활자, 실업자, 그리고 물론 자신의 꿈과 직업을 실현한 사람들을 포함해 이들을 소득과 생활수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승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독을 통해 최초로 유럽연합이 동쪽으로 확장된 것은 오랫동안 동부와 서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실현하는 전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통일이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비록 영토의 1/4이 사라짐으로써 고향을 잃어버린 독일인에게는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아주 조용하게 거의 인지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독일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간단히 언급하면,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주권국가로 나누어진

정향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공간을 가진 영어 사용권의 대학에서 생존기회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S. 59).

유럽에서 통일 독일은 증대된 자신의 영토와 국력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위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유럽은 항상 독일의 헤게모니를 두려워했고, 반면에 독일은 적대적 세력에 포위되고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과거 강대국의 힘을 제어하는 통합된 유럽이나 자신의 주권 일부를 공동의 목표에 희생하는 — 물론 당사국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 것이 항상 동요하는 유럽의 세력균형을 폐기하는 방법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이 소련제국의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독립과 자결권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충족되었다. 따라서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승자에 속한다. 사람들이 이런 연관을 생각할 때야 비로소 슈바벤(Schwaben) 모스바흐(Mosbach) 출신의 목사 카를 프리크(Karl Frick)이 독일통일을 빚대어 언급한 것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할 것이 다!(Wer denkt, der dankt!)”⁶³⁾

6. 결론: 비교 불가한 것의 비교

클라우스 오페의 의미에서 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해 특수사례로서 동독의 체제전환은 장점과 단점을 가졌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하였다. 특수사례로서 동독

63) 우리 가족의 친구인 프리크 목사가 1990년에 행한 언급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전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포스트-알타질서체제에서 비로소 커다란 행운, 더 나아가서는 축복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독일 및 전체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의 체제전환은 유일한 사례이다. 이러한 특수사례는 다른 나라의 체제 전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범사례로서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동독과 동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체제전환으로부터 두 가지 일반적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첫째, 바람직하고 일반적 이해에 따르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2개 국가로 분단된 나라는 자유의사에 따라 결국 통일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또는 강제적으로 통일된 국가는 평화롭게 서로 다시 분리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국가 통일과 분리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주변국의 동의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에 있어 사례가 될 수 있다. 비록 서로 적대적인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통일을 이룩하고 서로를 도우려는 민족적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외부적 환경이 통일에 우호적이라면 국가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역사가 가르치는 경험이다. 두 세대 동안이나 분단이 지속되었을 때, 누구도 독일통일이 분단된 독일의 양쪽에서 여전히 소망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 볼 수 있듯이,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스스로 해체하거나 민족적 단위로 분열되는 일들이 동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것도 이에 대한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 나라는 지각된 형태로 많은 민족국가들이 찢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스위스처럼 소수민족에게도 다수 민족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의 분리처럼 특별한 상황이 독일통일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면, 지난 17년 동안 달성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독일통일과 관련해 동독 주민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그 시위가 무력에 의해 진압되지 않았다는 점, 주요한 양 강대국이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통일에 관해 약속하였다는 것들이 당시의 행운이 가득했던 특별한 상황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독일 사례와 최근 동유럽 국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본고에서 논의된 방식에 의한 민족국가의 형성과 사회적 체제전환으로서 통일 또는 분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이 유리하고 필요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초국가적 방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다국가적인 방식이라면 더욱 장점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립을 확보하는 조직적 형태를 가진 국가 간 연합체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공동의 지원과 후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작은 나라들이 제각기 흩어진다면, 중앙아시아의 국가와 관련해볼 때 그 나라들은 머지않아 제국주의 강대국의 제물이 될 것이다.

■ 접수: 9월 5일 / ■ 채택: 12월 3일

참고문헌

- Andersen, U. und W. Woyke(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 Aufl.(Opladen, 2003).
- Bahrman, Hannes und Christoph Links, *Chronik der Wende*(Berlin, 1994).
- Bauer, Angela und Matthias Jestaedt, *Das Grundgesetz im Wortlaut: Änderungsgesetze, Synopse, Textstufen und Vokabular zum Grundgesetz*(Heidelberg, 1997).
- Brie, Michael und Dieter Klein(Hg.), *Zwischen den Zeiten*(Hamburg, 1992).
- Brunner, Georg und Boris Meissner(Hg.), *Verfassungen der kommunistischen Staaten* (Paderborn, 1980).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1989).
- _____,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06).
- Fischer, Wolfram(Hg.), *Trennbandanstalt: Das Unmögliche wagen: Forschungsberichte* (Berlin, 1993).
- Gorbatschow, Michail, *Wie es war: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Berlin, 1999).
- Görtemaker, Manfred,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der Gründung bis zur Gegenwart*(München, 1999).
- Gransow, Volker und Konrad H. Jarausch(Hg.), *Die deutsche Vereinigung: Dokumente zu Bürgerbewegung, Annäherung und Beitritt*(Köln, 1991).
- Habermas, Jürgen, *Die nachholende Revolution*(Frankfurt a. M., 1990).
- Hamann und Lenz,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vom 23. Mai 1949, 3. Aufl.(Neuwied, 1970).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Sämtliche Werke*, Bd. 7, der Jubiläumsausgabe (Stuttgart-Bad Cannstatt, 1964).
- Hertle, Hans-Hermann, *Der Fall der Mauer: Die unbeabsichtigte Selbstauflösung des SED-Staates*(Opladen, 1996).
- Kuppe, Johannes und Thomas Ammer, *Von der SED zur PDS: Analysen und Berichte des Gesamtdeutschen Instituts*(Bonn, 1991).
- Merkel, Wolfgang,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Empirie und Theo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Opladen, 1999).
- Merkel, Wolfgang und Hans-Jürgen Puhle, *Von der Diktatur zur Demokratie: Transformationen, Erfolgsbedingungen, Entwicklungspfade*(Opladen, 1999).

- Moreau, Patrick, *Die PDS: Profil einer antidemokratischen Partei*(München, 1998).
- Ritter, Gerhard A.,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es*(München, 2006).
- Rogner, Klaus Michael, *Der Verfassungsentwurf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der DDR*(Berlin, 1993).
- Schä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Stuttgart, 1991).
- Schröder, Klaus,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2006).
- _____, *Der Preis der Einheit: Eine Bilanz*(München, 2000).
-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Berlin, 1991).
- Thumfart, Alexander,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Frankfurt am Main, 2002).
- von Beyme, Klaus, *Systemwechsel in Osteuropa*(Frankfurt a. M., 1994).
- von Plato, Alexander,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Ein weltpolitisches Machtspiel* (Berlin, 2003).
- Wiesenthal, Helmut(Hg.), *Gelegenheit und Entscheidung: Policies und Politics erfolgreicher Transformationssteuerung*(Wiesbaden, 2001).
- _____, *Die Transformation der DDR: Verfahren und Resultate*(Gütersloh, 1999).
- Zelikow, Philip und Condoleezza Rice, *Die deutsche Einheit und das Ende der Spaltung Europas*(München, 2001).

논문 등 기타

- Rupert Scholz,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 Auftrag, Verfahren und Ergebnisse*, in: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52-53/93, vom 24. 12. 1993.
- http://www.bundestag.de/bau_kunst/berlin/debatte/bd_nam3.html. 2007년 1월 15일 검색.
- <http://de.wikipedia.org/wiki/Treuhandanstalt>. 2007년 2월 2일 검색.
- <http://www.pub.arbeitsamt.de/hst/services/statistik/000000/html/start/monat/aktuell.pdf>. 2007년 2월 14일 검색.

The Special Cas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s Transformation: Its particular conditions and exceptional consequences

Prof. Helmut Wagner(FREIE UNIVERSITÄT BERLIN)

Looking back on the GDR's transformation, on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have to deal with a line of big surprises. They start with the German reunification, which happened within 329 days, but was expected by almost no one. Then, in the following years, a complete renovation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of the former GDR took place, directed from outside, from the old Federal Republic, and financed by an unbelievable amount of money. And, last but not least, the result of this proved to be a complaining and frustrated part of the former GDR people, upset by what had happened to them.

In this paper the author deals especially with three aspects of the process concerned, with:

- the totally unexpected event of Germany's reunification;
- the difficult renovation process of a whole country; and
- the strange reaction of the people concerned.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in short: The renovation of the GDR's political system happened in the course of months; the reform of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 is not yet finished, after 17 years; and the mental change will take decades, at least the period of a generation. The Ossis, i.e. the East Germans, have not yet arrived in the Federal Republic. They, in part, still feel different and vote differently.

Keywords: German Democratic Republic's Transformation/ German reunification/ German renovation